정당한 사법행정? 부적절 재판간섭?

대법‘ 촛불재판 개입 의혹’ 조사 결과 오늘 발표

신영철 대법관 거취 관련 입장 표명 여부도 주목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단장을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휴일인 15일에도 전원 출근해 조사 결과 발표 문구를 수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날 밤늦게 또는 16일 오전에야 최종 발표문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김 단장이 발표하고 조사단원 대부분 배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결론은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재판 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집중배당은 사법행정의 영역이지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거나 아예 ‘신 대법관의 언행은 재판개입’이라고 결론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내용에는 촛불재판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신 대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시국사건 재판에 폭넓게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6일 전격 구성됐으며 7~8일 관련 판사 20명에 대한 조사를, 9~10일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신 대법관은 9일 오후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한 뒤 퇴근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닌지 긴박감이 돌았지만, 다음날 다시 조사를 받았다.

또 11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고 13일까지 관련 판사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모두 끝냈다.

조사단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불가론이 대세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정치권 입장이 갈려 있어 조사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차단한지 3일째인 15일 파주시 통일대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미귀환 사태’ 오늘이 분수령

정부 “강경 대응은 北 의도에 말려 드는 것”

16일 개성공단 통행재개 땐 방북 허용 가닥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과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가 16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에 이어 13일 2차로 통행을 차단한 북한이 만약 16일에도 통행차단 조치를 유지할 경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미귀환 사태는 나흘째를 맞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오는 20일 끝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늦어도 20일 이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 판단 아래 정부는 현 상황을 ‘귀환 지연 사태’로 규정하고 구두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런 기조 아래 정부는 16일 중 북한이 공단 왕래를 허용할 경우 우리 개성 기업인과 근로자의 방북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기업들로서도 키리졸브 훈련기간 남북을 왕래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된 터라 필요한 최소 인원들만 방북토록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출입 및 조업을 신축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16일에도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는 ‘준 억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의식하고 있다.

그 경우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 규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통행이 키리졸브 기간 전후로 정상화되더라도 정부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미 남북간 통행을 보장키로 한 합의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추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북한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및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은 것이다. /연합뉴스

“임차인 주거안정·피해 최소화”

김동철 의원 ‘부도임대아파트 보호법’ 발의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부도와 관련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돼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대주택을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느나,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대기간동안 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하면서 보증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선거의 여인’ 박근혜 이번엔 침묵?

20일 정수성씨 개소식때 경주 방문 안할 듯

경주지역의 4월 재보선에서 ‘친이(친 이명박) 대 친박(친 박근혜)’의 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친박의 정수성 예비역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경주는 친이계 핵심인 정종복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한 지역. 따라서 박 전 대표가 경주에 내려가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경우 파문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정 전 대장에 대한 분명한 지지로 해석돼 여권 내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듯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경주에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20일 경주에선 범 박씨 종친회가 주최하는 ‘신라시조대왕 춘분대제 봉황식’이 열린다.

따라서 개소식에는 가지 않더라도 문중행사에 참석, 정 전 대장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박 전 대표는 당초 이날 참석하려던 국회 이공계 모임 참석 계획을 취소한 상태여서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